

난민과의 ‘마주침’: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1. ‘가짜 난민’의 탄생

2018년 예멘 난민 반대 운동에서 탄생한 가장 강력한 기호는 ‘가짜 난민’이다. 예멘인들이 왜 난민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도 전에, 이들은 이미 ‘가짜 난민’이 되어있었다. 한국에 온 예멘 난민 다수가 옷을 잘 입고, 핸드폰을 소유한 ‘건장한 남성’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난민 반대 집단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온 가짜 난민이라 매도했다. 한국인이 상상해 온 익숙한 난민의 모습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는 저기 먼 곳의 병든 어린이나 여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한 비호국을 찾기 위해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적극적인 난민이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될 만한 진정한 난민성을 갖추지 못한 존재처럼 보였다. 예멘인들은 전쟁을 피해 임시적 혹은 장기적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신청자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있었다. 오랜 기간 제주에 결박된 채, ‘가짜 난민,’ ‘테러리스트 무장난민,’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남성으로 의미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히스테리적 감정을 구성하는 기호가 된 것이다.¹⁾ 한국 정부는 난민 수용의 문제를 ‘국민대 난민’이라는 프레임에 내버려 두었고, 예멘 난민은 다양한 국민감정의 분출구의 대상이 됐다. 21세기 글로벌 난제인 난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대 난민 프레임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거해버렸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체제 입법으로서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 최초의 독립체제 입법으로 난민법’ 제정을 선전하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신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 약속은 2018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앞다투어 제출한 ‘난민법 폐지’ 법안을 앞에서 무색해졌다. 난민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주권국가의 모습은 정작 난민이 유입되는 순간, 침묵 혹은 혐오로 양분되었다. 대량 난민의 유입을 처음 겪은 한국 사회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나 정치권, 여론이 난민협약이나 난민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민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제주 예멘 난민 상황이 알려지자마자, 한국 정부는 ‘가짜 난민’을 색출하고, 남용적 난민신청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면서 ‘치안 국가’의 위상을 과시했다. 예멘 난민 반대 운동에서 표출된 것처럼 ‘우리’와 ‘국민’이란 원초적 감정은 포섭과 배제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해 언제라도 소구된다. 하지만 국민과 비국민 난민의 공존을 위한 확장된 민주주의의 상상력이나 실천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없고, 교육, 미디어, 종교, 법에 깊이 침투한 인종적 사고 또한 질문되거나 도전받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법치주의도, 인권과 호혜주의에 입각한 세계시민주의도, 둘다 지켜내지 못한 채 국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즉,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사이 난민들을 향한 혐오의 말들이 그 자리를 지배”²⁾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치안적 관리는 혈연적·영토적·인종적 배타주의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면서 국민 되기의 과정을 수행해왔던 국민의 지위만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예멘 난민 사태는 언제라도 국민대 난민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법이나 제도의 일관적 관철을 통해 지켜가야 할 민주주의가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난민과의 마주침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미완성과 확장적 민주주의의 상상력을 동시에 일깨운다.

1) 김현미 (2018), “난민포비아와 한국의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101호.

2) 백가윤, “제주 예멘 난민,” 2018 한국 사회, 인종차별을 말한다. 2018년 7.20-21. 인종차별보고 대회 발표문.

2. 코로나 펜데믹과 훼손되는 난민 인권

2020년 12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은 법을 남용하는 난민신청자를 신속하게 가려내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난민 인정율은 불과 0.04%였다. 난민법이 시행된 이래 난민 인정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 법을 난민 불인정법이라 불러야 할 지경이다. 특히 글로벌 이동제한령과 국경통제, 영토주의, 감찰시민이라는 세 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펜데믹 시기에 난민신청자의 '추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는 외국인용 재앙의 원인 제공자로 혐오하거나 방역과 회복의 과정에서 배제를 '자연화'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다. 코로나 시기 난민과 같은 이주민은 이동성이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혹은 타인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의심과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나마 미약하게 제공되던 난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높였다. 이미 '국민' 중심의 방역 대책으로 이미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삶은 위태롭고 취약해졌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웠고, 지병이 있는 이주민이 애용해 온 국공립, 적십자 병원이 방역지정병원이 되어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다. 또한 방역 관련 정보가 주로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두 언어를 모르는 다양한 출신국의 난민들의 혼란과 공포 또한 가중되었다. 2020년 4월 6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전염병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며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 및 회복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 12, 13조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재난이나 위급상황에서 이런 법적 권리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개정된 난민법을 신속하게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 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또 한번 법치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인권 보호 모두가 위로부터 '훼손되고' 있다. 본국으로 귀환할 수도, 비호국에서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는 난민들은 매일의 공포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하지만 난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통을 발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본국의 가족이나 주변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다. 일자리의 불안정성, 사회 안전망의 부재,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주거시설,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의 부재 등은 난민을 더욱 '난민화'시킨다. 난민이나 이주민의 자격을 묻지 않고 상호 책무와 돌봄을 강조하는 공동체법 해법은 태동하지 않았다.

3. 난민과의 공존을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 글로벌 거대 자본의 경제적 약탈, 무리한 건설 및 개발에 의한 거주지 파괴, 종족 및 종교 분쟁 등 난민 발생 사유는 점점 다양해지고 난민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국만 예외일 수가 없다.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로 불거진 국민과 난민의 이분법은 마치 두 존재가 지향하고 공유하는 것이 없는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게 했다. 무엇보다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 없다고 전제된 비국민, 난민, 혼종적 존재들은 상상의 공동체인 국민과 연대할 수 없는 존재로 간주된다. 또한 난민이 자신의 경험, 다양성, 지향을 표현할 공적 통로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이들은 '가짜 난민'이란 프레임에서 늘 국민의 반대항으로만 상상된다. 이런 위계적 이분법에 의존한 배제와 혐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적 평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동원하여, 난민에 대한 적대를 부추기는 감정 정치는 실질적인 '탈정치화'를 이끈다. 선거제도, 정당 정치, 참여적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속의 민주주의 철학보다 가짜뉴스, 감정적인 분노나 무지로 난민 문제를 사유화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 국가의 역사와 난민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무엇보다 식민지 지배, 가난, 전쟁을 통해 많은 난민을 배출한 난민 발생국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살고 있는 한인 중에는 박정희 군부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망

명한 민주화 인사들, 학생 운동권, 성소수자, 한국 남편의 폭력으로 도피한 결혼이주여성, ‘훈혈인’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탈북한 북한민들도 대표적인 난민 인정자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국가와 정권에 의해 추방당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준다. 전 세계는 지속적으로 난민 발생과 난민 비호라는 중첩된 역할속에서 상호 연대와 발전을 모색해왔다. 영원한 난민 발생국과 난민 비호국이란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고, 난민은 초국적인 형태로 전 세계의 민주화를 앞당긴 존재들이다.

1988년 버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한국에 와서 난민이 된 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 미얀마인들은 군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며, 다시는 난민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다. 해외에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모욕 당하고, 살해되고,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한인들 또한 난민의 감정으로 그 나라를 떠날 수 있다. 한국에 사는 난민은 한국 근현대의 사회 발전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루카 마벨리(Luca Mavelli)는 난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배제해야 할 존재로 이분화하는 담론은 국가에 의해 조장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런 담론의 발현 또한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자국민에 대한 통치방식이라는 것이다.³⁾ 전 지구적인 난민 이슈를 난민 발생의 원인이나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기보다 감정의 차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통치성의 핵심이 된다, 결국 기존의 국민 대 난민이라는 이분법안에서 난민 보호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 다행히도 제주 예멘 사태를 통해 난민 비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포용적 공존을 지향하는 종교인과 시민들은 난민 인권 보호와 지원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난민 인권 보호 역량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난민은 동질적 범주도 아니고, 난민의 삶 자체는 영웅적이지도 그렇다고 매번 피해자적이지도 않은 복잡한 조건, 즉, 다양한 기회·모험·위험과 거래의 상황에 놓여있다. 난민을 보호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전형적 베품의 위계질서 안에서 이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상호관여의 윤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과 선주민이 함께 일하고, 거주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서서히 생겨나는 가능성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⁴⁾

난민은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박탈당한 존재지만, 이 때문에 비호받을 권리를 운반하며 국경을 넘는 존재들이다. 난민의 삶의 질과 역량 발휘는 그들이 체류하는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에 달려있다. 취약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국의 난민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 제일주의, 성 불평등, 인종주의에 의해 지속 중인 ‘미완의 민주화’ 상태를 환기하는 존재들이다. 확장적 민주주의는 모든 집단의 상호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접촉, 만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앞을 통해 서로의 현존을 인정하는 공동체적 형식을 구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은 본국과 이주국의 경계를 횡단하면서 두 지역의 사회적 재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새로운 정치적 결속과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Mavelli, Luca(2017), “Governing populations through the humanitarian government of refugees: Biopolitical care and racism in the European refugee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3. part 5, pp. 809-832.

4) 서울의 바라카작은도서관(www.barakakorea.com)이나 인천의 아랍계 난민여성의 공동체인 와하(Wahha), 제주의 예멘 음식점 등이 적극적인 선주민-난민간의 교류를 만들어내고 있다.